

〈추진부서〉 경기도 성남시 물순환과(031-729-4182)

잠자고 있는 땅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다 〈전국최초 비행안전 1구역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행위제한 완화〉

• 개선배경

〈현황〉 성남 하수처리장은 성남시 전역(판교제외)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29년간 운영함에 따라 시설 노후로 인해 과도한 수선유지비 및 시설개선비 등 막대한 예산 소요
또한, 하수처리장이 설치(1992년)되었을 때의 주변환경(논, 밭 등)과 달리 현재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심지로 변모되어 인근주민 및 주요간선도로 이용자의 악취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

- 성남시는 하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합하는 '성남환경기초시설 통합 현대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는 공공개발을 통해 행복주택, 재개발 순환주택, 창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임
- 그러나, 통합현대화사업 부지는 군사기지법 상 비행안전 제1구역에 속하여 군사시설 및 도로를 제외한 모든 시설의 설치가 제한된 지역으로 현대화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임
- 하수처리시설은 시설 특성상 배수구역 하류에 입지하여야 하나, 비행안전 1구역과 중첩되어 군사기지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

▶ 맑은 물이 흐르는 친환경 개발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건의

• 개선내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개 선 전	개 선 후
- 비행안전 1구역 내에서 군사시설 및 도로를 제외한 모든 시설의 설치가 금지	- 비행안전 1구역 내에서 지하에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 및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 가능

- 군사기지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 군부대,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업한 결과, 지난 3월 군사기지법 개정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 추진과정

○ 군부대 협의

- 2018. 10. : 성남수질복원센터 현대화사업 보고(T/F팀 구성 및 운영)
- 2018. 10. : 비행안전1구역 저촉에 따른 군부대(15비)협의
 - 비행안전1구역 내 지하구조물 설치에 대하여 심의절차 이행 협의
 - 심의내용 : 작전성 검토 및 비행안전1구역 심의(15비 및 공군본부)
- 2018. 11. : 비행안전구역내 행위협의 [성남시 → 15비]
- 2019. 1. : 1구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건의서 제출 [성남시 → 15비]
- 2019. 2.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저촉, 입지불가 통보 [15비 → 성남시]
- 2019. 3. : 관련사항 재협의(법률개정에 대한 의견 요청) [시 → 15비]
 - 그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고 기존시설을 포함한 완전지하화계획에 긍정적 검토의견, 군 심의절차 이행과정에서 법률개정 필요 사항 결정

○ 규제개혁 간담회 안건 상정

- 2019. 3. :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계획 알림[경기도 → 성남시]
- 2019. 3. : 규제개혁 간담회 안건제출[성남시 → 경기도]
- 2019. 5. :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 비행안전 제1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설명
- 2019. 7. : 규제개혁 간담회 개선과제 보완요청[경기도 → 성남시]
- 2019. 7. : 규제개혁 간담회 개선과제 보완제출[성남시 → 경기도]

○ 중앙부처 협의

- 2019. 3. ~ 2020.2. : 사업추진 및 법률개정 관련 간담회 다수 시행(국회의원, 성남시, LH공사)
- 2019. 7. : 군사기지법 개정안 국회 상정
 - 개정안 국회 상정 후에도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개정 필요성 지속적 설명
- 2020. 3. : 본회의 통과 및 공포

• 개선효과

- 전국 최초 비행안전 1구역 내 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능(제도적 기반 마련)
- 행복주택, 재개발순환주택 및 창업지원 시설 설치 등 지역 균형발전 기여
 - 성남시는 가용토지가 부족한 상황이나, 환경기초시설의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부지를 이용한 공공개발 등 토지 이용효율 향상
- 기존부지 개발에 따른 일자리 창출(2,500명) 및 주거공급(3,000세대)
- 전국 11개 군사비행장과 군 접경지역의 군사시설에 관한 규제개혁 계기 마련

자료

중부일보

HOME 정치 국회·정당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성남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법' 국회 통과

김태년 | 승인 2020.03.08 17:31



김태년 국회의원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를 위한 군사기지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부지의 일부가 성남비행장 비행안전 제1구역과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4월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사기지법 개정안 통과로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사업은 계획대로 순항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민간재에서 접수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뢰, 2021년 하반기 적적성검토 및 투자심의 완료, 2022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6년 상반기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될 계획이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는 성남 하수처리장, 폐기물종합처리장,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센터를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에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하수처리장을 이전한 뒤에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에는 공공주택, 창업지원시설, 원도심 순환재개발에 필요한 이주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은 인근 주민들의 29년 숙원사업이다.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에 위치한 성남 하수처리장은 1992년 준공돼 29년째 운영 중이며, 악취발생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태년 의원은 "29년 주민숙원 사업이었던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를 위한 법이 통과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성남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sd1919@joongboo.com



23일 경기 성남시장에서 열린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의 공공개발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협약'에 참석한 변창흠 LH 사장(사진 왼쪽)과 은수미 성남시장(사진 오른쪽)이 협약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LH)

[아시아경제 이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가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위해 손을 잡았다.

LH는 23일 경기 성남시장에서 성남시와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의 공공개발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수정구 북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는 1992년 준공된 후 하루 46만 규모의 하수를 처리해왔다. 하지만 노후화에 따른 관망비율 증대와 악취 등 민원유발 문제를 겪어온 사실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 이전 및 종전부지 활용에 대한 양 기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업무분장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종전부지를 활용한 공공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성남시는 센터를 수정구 태평동 단원동 인근의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로 옮겨 처리와 동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LH는 약 27만㎡ 규모의 종전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위례신도시와 북정지구를 잇는 '성남일자리 창출 벨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LH는 종 3000가구 규모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80% 이상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LH는 '성남창업 특화마을'을 주제로 청년·사회초년 성 등의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지원주택과 지식산업센터 등 지원시설을 공급하고 성남시 도심 재개발 사업 지원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도 함께 마련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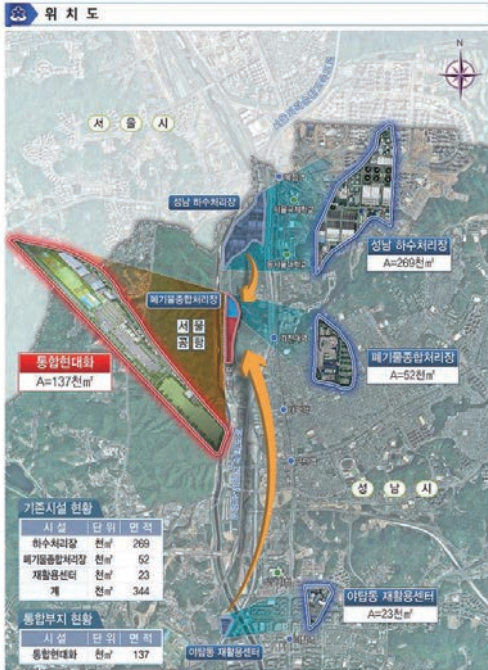
이번 사업은 성남수질복원센터 현대화사업 완료 후 2025년 지구 지정 절차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한편 해당 부지는 비행안전 제1구역으로 군사시설과 도포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었지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기초시설 등 비행에 지장이 없는 공공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군사기지법 개정을 지원하면서 이번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LH측 설명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시설 이전부지의 공적개발을 통해 LH와 지자체가 상생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자체와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성남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현대화 사업



조감도 및 개발구상(안)

